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655
----------	------

제안년월일 : 2026년 04월 20일

제안자 : 규제개혁 특별위원장

1. 주 문

- 정부는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항공 안전을 전제로 하되 김포공항 주변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위축과 재산권 제약 실태를 고려하여 현행보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전문가·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최소침해 및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 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2025년 8월 4일 발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사항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나. ICAO의 개정된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 체계를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여 항행 현황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편하였음. 그러나 국제기준이 평가표면의 확대·신설을 전제로 설계됨에 따라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 과정에서 규제적용 범위와 표준 고도제한이 오히려 강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다. 특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에 지속적인 제약이 있었음.

라. 이와 같은 여건 등을 고려하여 ICAO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 기준은 항공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하되, 기존보다 고도제한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 비행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 및 관계기관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내기준 마련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위축 없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항시설법」 등

나. 기타사항 :

4. 이 송 처

○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 8월 4일 발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사항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ICAO의 개정된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 체계를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여 항행 현황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편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이 평가표면의 확대·신설을 전제로 설계됨에 따라, 국내 적용 과정에서 규제 적용 범위와 표준 고도제한이 오히려 강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추진에 지속적인 제약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ICAO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 기준은 항공안전 확보를 전제로 하되 기존보다 고도제한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2025. 8. 4. 발효)의 국내기준 마련 과정에서 항공안전 확보를 전제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내기준 마련 과정에서 ICAO 개정 체계상 평가표면이 국내 공항 여건 및 비행절차에 따라 조정 가능함을 적극 활용하여, 최소 침해 원칙을 반영한 평가표면 기준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국내기준 마련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지자체, 항공안전·도시계획 전문가와의 공개적·실질적 협의 체계를 제도화하라. 아울러 항공학적 사전검토 제도 등 절차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라.

셋. 정부는 신뢰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기존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존중하고,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도시정비가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이행하라.

2026. 04. 2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